

국가교육위원회 X
부산광역시교육청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학교
시민
교육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14:00~17:00

장소 | 아바니 센트럴 부산 5층 아바니홀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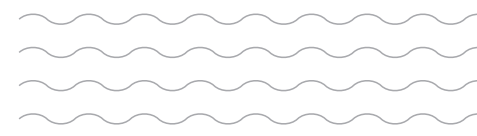


01 인사말씀

02 개최계획

03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

04 토의 참고자료



01

인사말씀

학교
시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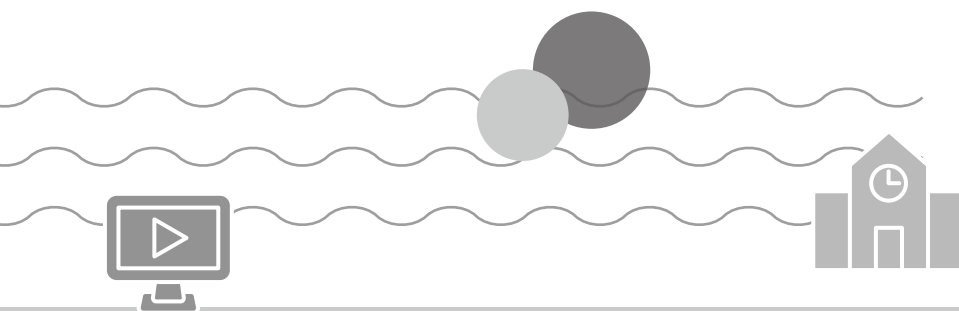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국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과 미래 교육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부산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자리를 빛내주신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며, 이에 뿌리를 둔 허위 정보,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이 학교 교실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 현장에서는,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시민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왔습니다. 학교는 갈등을 단순히 외면하고 회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품격 있는 국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시민교육이 멈추어 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우리 미래 세대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토대를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토의할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나침반을 마련하고자 오랜 숙고 끝에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누어 주실 생생한 목소리와 제안들은 현장에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시민교육의 원칙을 완성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의 학교시민교육이 활짝 꽃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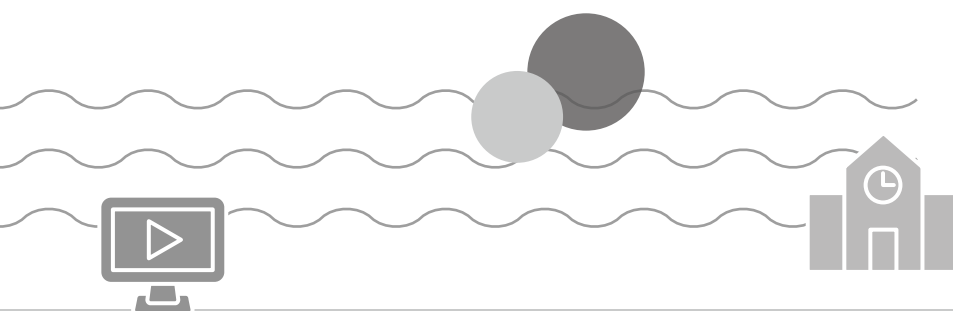


학교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그리며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다양한 민주시민 역량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교시민교육 국민참여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배움터로서의 학교 역할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고자 함께해 주신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여러분,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여 주체적
판단력과 시민성을 기르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공동체 참여 역량을
균형 있게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시민교육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공의 관점에서 살피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과 협력의 장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학교시민교육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국가 교육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학생들이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지닌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교육의 내일을 비추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02

개최 계획

학교
시민
교육





진행순서 및 토론주제

진행순서

1부 발제 및 질의응답 (45분)

14:00-14:02	개회 및 국민의례
14:02-14:10	인사말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14:10-14:13	AI시대 미래교육방향 토론회(6월) 결과 발표
14:13-14:33	발제 :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원칙(안)의 배경·취지 · 주요 내용 설명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14:33-14:43	질의응답
14:43-14:45	단체 사진 및 휴식

2부 소그룹 토의 및 결과 공유 (130분)

14:45-14:50	토론 안내 (진행 순서 및 방식)
14:50-16:30	소그룹 토의 퍼실리테이터 주제 설명 · 주제 1~3 토의
16:30-16:45	토의 결과 공유
16:45-16:55	마무리 및 폐회

토론주제

본 토론회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한 3가지 주제로 소그룹 토의가 진행됩니다.

1

AI시대, 학생들이 주체적 사고력과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2

이 원칙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안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이 원칙안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3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

학교
시민
교육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전문

오늘날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깊은 분열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교실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파적 시비를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무조건적 중립이나 일방적 주입으로는 미래 우리 사회 주인공들의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실이 사회적 갈등의 각축장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어야 함을 통감하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적 기본원칙을 세운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한국형 학교시민교육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 교육을 금지하는 한편,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시민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원칙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를 담고자 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과 기본원칙을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합의를 통해 학교는 시민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은 공공의 문제에 관한 주체적 판단력과 시민성을 함양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품격있는 국민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제1장 총강

제1조(학교시민교육의 정의) 학교시민교육은 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여, 학생이 공공 문제를 사실과 근거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며, 다원성과 절차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공적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원칙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제2장의 교육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수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과수업과 비교과 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와 지역사회) ① 학교 구성원 모두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가 실천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시민교육의 취지와 방법을 학부모·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는 헌법상의 핵심 가치의 범위 안에서 학생과 가정의 다양한 신념과 세계관을 존중한다.

제4조(교육 현장 판단의 존중) 교육자가 학교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하여 현장 상황에 적응하여 내리는 판단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교육자가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이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호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적 의사의 정의) 제5조의 교육적 의사란 학생의 시민적 역량과 품성 함양,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말한다.

제2장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제7조(헌법의 가치와 원리) 학교는 학생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국제 평화와 통일 지향 등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제8조(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 학교는 학생에게 존중과 관용, 공감과 정의, 참여와 협력, 다양성 존중 등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제9조(자유와 한계와 책임) 학교는 학생에게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제10조(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① 학교는 학생이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가르친다.

② 학교는 학생이 디지털 및 대면 공론장의 작동 방식, 그 편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판단 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친다.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① 학교는 학생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反)시민적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

제3장 교육활동상의 기본원칙

제12조(명확성과 논쟁성) ① 제2장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라 명확하게 교육한다.

② 제1항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중 그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제13조(시의성의 원칙)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

제14조(안전성의 원칙) 학교시민교육에서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치활동,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04

토의 참고 자료

학교
시민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학습자료

학교시민교육, 쉽게 알아보기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국민 의견수렴에 앞서 함께 읽는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목 차

	내용
1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요?
2	왜 지금 더 필요해졌나요?
3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4	학생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5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독일·영국)
6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들
7	마무리하며 -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도 학교가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학교 교육이 추구해 온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은 거의 안 한다"는 말과 "이미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민교육을 이렇게 정의해요

출처	설명
교육기본법	국민이 인격을 갈고닦고,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이쌍철 외 (2019)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가치·태도·기능을 기르는 교육. 지식만이 아니라 삶 속의 참여와 실천을 강조
장익선 외 (2020)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갈등은 평화롭게 풀고, 다수결을 존중하되 소수 의견도 보호하도록 돕는 교육
옹진환 외 (2024)	학생을 '지금 이 순간의 시민'으로 존중하며, 공동체의 여러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민주시민성', 6가지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학생에게 필요한 민주시민성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래 6가지가 연결되어 함께 함양됩니다. (출처: 장익선 외, 2020)

영역	쉬운 설명
① 공공선과 공동체 의식	민주주의를 믿는 마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갈등을 평화롭게 풀고 참여하는 힘
② 인간 존엄성과 인권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지키려는 마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③ 문화 다양성과 공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 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힘
④ 지속가능성과 상생	정치·경제·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책임감
⑤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공감하고 경청하는 힘, 충분히 이야기 나눈 뒤 다수결로 정하되 소수 의견도 지키는 힘
⑥ 비판적 사고와 리터러시	내 생각을 스스로 점검하는 힘, 미디어와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는 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 조항 및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및 추구하는 인간상[교육의 목적 및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국가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비판적 조사·분석·평가 등 탐구 과정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며, 타인 및 환경과의 소통·협력·공감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사항 (범교과 학습 주제)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 목표]

자신과 이웃, 상호 의존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태도를 갖춘다.

[중학교 교육 목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및 내용 - 자율·자치 활동

자율·자치 활동은 학생 주도의 학급·학교 공동체 활동, 자치 활동, 민주 시민적 정체성 형성 활동, 자기 주도적 탐구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 주도 자치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절차를 체득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학교의 시민교육, 이렇습니다.

학생은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 배울 권리, 학교생활의 안전, 선생님의 전문성, 학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어느 한쪽 입장으로 이끄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만나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핵심은 '공적 의사결정' 경험입니다. 학급 규칙을 함께 정하는 일, 학교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일, 차별적 표현을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하는 일, 우리 동네 문제를 살펴보는 일 등 공적인 영역에서 참여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입니다.

2. 왜 지금 더 필요해졌을까요?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지켜지고 발전합니다. 오늘날 학교 시민교육에 관심이 커지는 데는 아래와 같은 사회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① 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지역·세대·계층·이념 갈등이 뒤섞이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자가 늘며 사회 구성원이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 인공지능 발달, 불평등 확대 같은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힘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② 시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늘고, 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정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많아지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참여가 늘고 있고, (예: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 경제 불안정, 문화 충돌,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납니다.

③ 시민사회가 국경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시민의 활동 무대가 국가를 넘어 세계로, 그리고 온라인 공간으로 넓어지고 있고,
- 가짜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환경에서,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가 더 중요해집니다.

④ 권리와 책임은 함께 배워야 합니다.

- 민주시민교육은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이자 동시에 책임을 배우는 교육이고,
- 학생은 존중받을 권리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학생의 배움과 안전을 존중할 책임도 있습니다.

3.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세 갈래로 운영됩니다.

방식	설명
① 교과 수업	주로 사회과·도덕과 수업에서 다룹니다.
② 범교과 학습	특정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활동에 걸쳐 주제로 다룹니다.
③ 학교 참여 활동	학생회 등 학교 안 자치 활동을 통해 익힙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서로 연계가 약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서상의 목표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쌍철 외, 2019). 교육과정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여러 성취기준 중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는 힘(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의선 외, 2020).

실제 학교 운영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학교 교육계획서를 분석해보니, 중·고등학교 모두 '민주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갖춰져 있었지만, 중학교는 '실제로 실행할 토대', 고등학교는 '실행 후 개선을 위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이소연 외, 2019).

즉, 참여 분위기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평가 체계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의 민주적 문화와 풍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의 개방적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문화와 운영 전반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 주체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어떻게 이어져왔나요?

민주시민교육은 광복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하며 학교 교육의 목표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아직 별도의 법령은 없고,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향점과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정책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희현 외, 202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실에서 사회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피하고 현실의 갈등을 외면하는 방어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정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각도로 균형 있게 소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독일 등 교육 선진국은 이미 반세기 전, 학교 안에서 정치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독재나 중우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성 속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는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5장 참고).

반면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갈등이나 민원을 우려해 시사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민주주의·인권·노동·성평등처럼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선생님이 정치적 논란이나 민원에 대한 부담을 느껴, 정작 필요한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공존, 연대 등 시민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와 SNS의 발달로 시민들이 마주하는 공공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고, 사회적 신뢰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판적 사고, 정보 판별, 민주적 소통, 갈등 조정, 디지털 시민성 등의 역량 함양이 절실해졌으며, 시민교육은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보고서 중, 2026).

시민교육,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최근 학계·현장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리된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희현 외, 2025).

구분	질문	의견(예시)
개념과 방향	학교 시민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	사람마다 시민교육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예절·공동체 의식을 떠올리는 사람도, 헌법·인권을 떠올리는 사람도, 토론·참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가 공통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기본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질문	의견(예시)
내용과 범위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칠까?	민주주의·인권·법치·책임·참여 같은 기본가치는 가르쳐야 합니다. 다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특정 입장을 주입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수업과 학교생활	지식 교육과 참여·실천 경험,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교과서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실제로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교 지원	선생님이 안전하게 가르칠 조건은 무엇일까?	논쟁적 주제 수업은 오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수업 자료·연수·학교 차원의 기준·학부모 소통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제도와 지속성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참고할 최소한의 기준과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성과 확인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시험 점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학생이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지, 근거를 들어 말하는지, 공동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쟁점을 풀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와 생각해보기

번호	과제	의견들(예시)
①	개념과 목표 정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②	교사 자율성 존중	국가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학생과 학교를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가 스스로 판단해 실천하도록 자료·연수·상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③	학교 운영의 민주성	수업 내용만이 아니라, 학생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규칙이 공정하게 정해지는지 같은 학교 운영 방식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④	제도적 기반 마련	담당자나 정책 기조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연수·법적 근거를 안정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⑤	증거 기반 정책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꾸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4. 학생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중학교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장익선 외, 2020).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아는 것(지식·이해)'에 비해 '실천·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들의 생각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민주 시민성 수준을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아래처럼 사회 참여와 관련된 항목은 점수가 낮았습니다.

항목	점수(5점 만점)	그래프
선거 외 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 활동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2.8점	■■■■■□□□□
공청회·청원 등 공론의 장에 적극 참여한다	3.3점	■■■■■□□□□

즉,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신념과 개인적 실천은 높은 편이지만, 제도적·사회적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선생님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토론·참여·공론장 경험을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학생을 안전하게 도울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연수,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동료 협력 체계, 학교 운영의 민주성 등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중학생은 대체로 초등학생보다 더 낮았고, 초등학생은 '참여와 실천', '문화 간 교류와 대화', '비판적 사고와 성찰' 같은 실천·기능 역시 실천 측면이 약했습니다. 요컨대 우리 학생들은 지식·이해에 비해 비판적 사고와 실천 측면의 민주 시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바라는 것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학생과 선생님의 답은 비슷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내용을 더 배우기'보다 '실제로 참여하고 경험할 기회'를 더 원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것	초등학생 (5점 만점)	중학생 (5점 만점)
학교 밖 단체와 함께하는 체험 기회	3.9점 ■■■■■■■■■■□□	3.6점 ■■■■■■■■□□□
학교 안 다양한 참여 활동 (교칙 만들기 등)	3.8점 ■■■■■■■■■■□□	3.5점 ■■■■■■■■□□□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3.8점 ■■■■■■■■■■□□	3.5점 ■■■■■■■■□□□
수업 시간에 관련 내용을 더 배우기	3.5점 ■■■■■■■■□□□	3.3점 ■■■■■■■■□□□

(출처: 장의선 외, 2020)

선생님들도 특정 시기에 몰아서 하기보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더 중요하게 봤고, '관련 교과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며 '교수·학습 환경 개선'을 더 선호했습니다.

교사가 동의하는 활성화 방안	동의 비율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84.7% ■■■■■■■■■■□□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80.9% ■■■■■■■■■■□□
학교 밖 시민교육 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77.5%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69.0% ■■■■■■■■□□□
특정 학기·학년에 관련 활동 집중 배치	65.9% ■■■■■■■■□□□
민주시민교육과 밀접한 교과의 비중 증가	65.7% ■■■■■■■■□□□

5.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교육을 고민할 때 자주 참고되는 두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영국의 '크릭 보고서'입니다. 앞의 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방법·원칙)'에, 뒤의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내용·요소)'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이 됩니다.

두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 관심사는 '중립성'입니다. 여기서 중립성은 논쟁적인 주제를 아예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에게 특정 입장을 주입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논쟁적 현안을 다루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보여주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을 '포용적 중립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옹진환 외, 2024).

독일 - 보이텔스바흐 합의 (1976년)

1976년 독일 남부 보이텔스바흐라는 도시에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학자·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극심한 좌우 진영 갈등은 교실 속까지 유입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수업에서 논쟁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교육이 어느 한쪽 이념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입장이 달라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였고 약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원칙은 여러 나라에서 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독일 통일 이후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칙	의미
① 교화(주입) 금지	'올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교사는 학생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논쟁성 재현	학문·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수업에서도 그대로 논쟁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여러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상 한쪽 입장을 강요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③ 학생 이해관계 고려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합의는 '무엇을 가르칠지'는 비워두고 '어떻게 가르칠지'라는 방법에 집중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이 담아야 할 방향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고, 사회가 이미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사안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웅진 환 외, 2024). 이런 이유로 세 원칙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 크릭 보고서 (1998년)

영국에서는 낮은 투표율, 청소년 문제 증가, 사회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998년 버나드 크릭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자문위원회가 시민교육 보고서(이른바 '크릭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민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을 것을 권고했고, 이후 영국 중등 교육과정에 '시민(Citizenship)' 과목이 도입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요소	의미
사회·도덕적 책임성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도덕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교실 안팎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공동체 참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삶과 관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참여하고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치적 문해력	지식·기능·가치를 통해 공적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사회문제에 책임 있게 참여합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입장이 달라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의 원칙'(교화하지 않기, 논쟁을 논쟁으로 다루기, 학생을 판단의 주체로 존중하기)을 보여주고, 크릭 보고서는 시민교육이 담아야 할 '내용의 요소'(책임성, 참여, 정치적 문해력 등 보편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두 사례 모두 시민교육이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각국의 정치·역사적 맥락이 다른 만큼,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보완하는 과제가 함께 있습니다. (옹진환 외, 2024).

공통 시사점
① 시민교육에는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② 특정 입장을 주입하지 않으면서도 쟁점을 교육적으로 다루야 합니다.
③ 학생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동시에 판단·참여하는 주체입니다.
④ 수업·학교문화·자치·지역참여가 연결될 때 효과가 큼.
⑤ 선생님이 안전하게 실천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6. 함께 생각해봅시다.

쟁점 1. 공통 가치와 논쟁적 쟁점의 구분

학교는 인간 존엄, 인권, 자유와 평등, 법치, 민주적 절차, 다원성 존중 같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를 가르쳐야 해요. 다만 이 가치가 현실의 정책·제도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통 가치로 가르칠 것인가'와 '어떤 사안을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논쟁적으로 다룰 것인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2. 중립성의 의미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중립성은 특정 정당·정치세력의 입장을 선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쟁점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보여주듯, 논쟁적인 사안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 중립성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쟁점 3. 시의성 있는 주제와 발달 단계

학생들이 이미 접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을 학교가 무조건 피하면, 학생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속에서 혼자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쟁점을 다룰 때는 학생의 연령·발달 단계·배울 권리·심리적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같은 주제라도 초·중·고에서 다루는 방식과 깊이는 달라져야 합니다.

쟁점 4. 안전한 표현과 혐오·차별의 제한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혐오·차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이 근거와 존중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도, 편견·모욕·따돌림이 왜 민주적 공동체를 해치는지 교육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쟁점 5. 교사의 전문성 보장과 책임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수업은 오해나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부담을 선생님 개인에게만 맡기면 수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후보를 선전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사회 쟁점을 다양한 관점과 근거로 다루는 활동까지 위축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의 책임 기준과 교육 활동 보호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정답을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7. 마무리하며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말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판단·대화·참여·책임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학교는 갈등을 감추는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다루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존재 이면서도,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학부모·교원·시민은 그 성장을 함께 지지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민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적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참고문헌

- 강영혜·양승실·유성상·박현정·배정현(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교육부 보도자료(2018.12.13.).
- 웅진환 외(2024).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 및 원칙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소연 외(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쌍철 외(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외(2025).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장의선 외(2020). 「민주시민성 지표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분석」 및 『학교 수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학습자료

디지털 시대의 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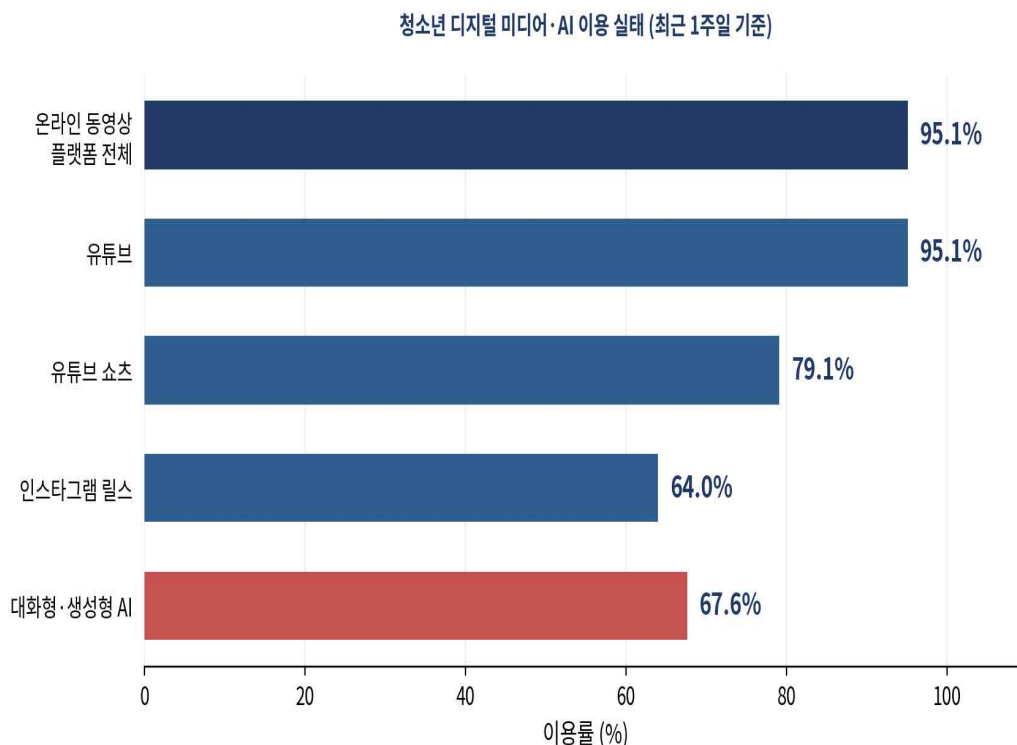
디지털 시민성, 왜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까요?

국가교육위원회

1. 디지털 환경, 학생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보냅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정보를 얻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과 정보 검색에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특정 AI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오락 수단을 넘어, 친구를 사귀고 사회를 이해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95.1%에 달하며, 대화형·생성형 AI를 이용해 본 청소년도 67.6%나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가장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35.8%)에서 인스타그램 릴스(37.2%)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릴스는 유튜브보다 더 짧은 영상 위주이며, 친구와 메시지로 콘텐츠를 주고받는 방식이 활발해 정보 소비를 넘어 또래 관계와 자기표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그림 1.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AI 이용 실태

추천 알고리즘, 왜 문제가 될까요?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비슷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이용자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영상을 오래 보았는지, 무엇에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분석해 사람마다 다른 정보를 추천합니다. 같은 앱을 써도 첫 화면에 뜨는 뉴스나 영상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거나 다음 콘텐츠를 계속 클릭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Ribeiro et al., 2020). 실제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했던 한 개발자는 시청 시간이 핵심 지표였으며, 이용자가 특정 이슈 영상을 한두 번만 보아도 알고리즘이 이를 관심사로 인식해 비슷한 영상을 계속 추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The Guardia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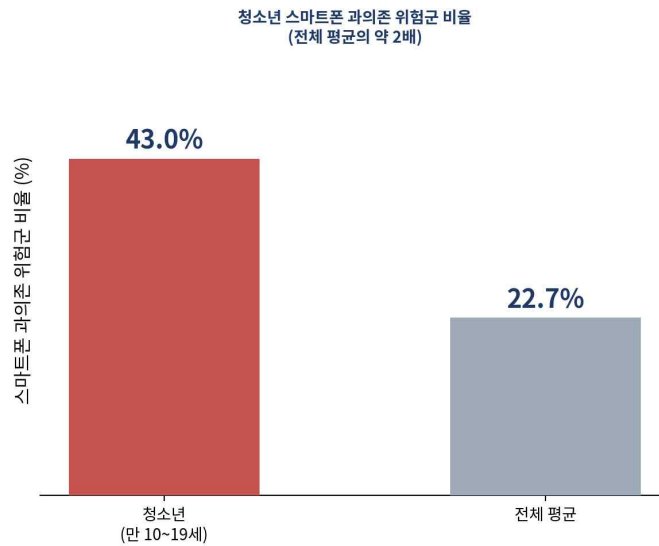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필터버블'과 '에코챔버'입니다. 필터버블은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맞는 정보만 반복해서 보여주어 다른 관점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Pariser, 2011). 에코챔버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현상입니다(Sunstein, 2017).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도 논쟁거리입니다. 2025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메타 전 직원들이 청소년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OMO)'을 이용해 체류 시간을 늘리는 구조를 기업이 미리 알고도 설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미디어스, 2026).

청소년이 더 취약한 이유

이러한 환경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주지만, 청소년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로, 감정적 자극에 민감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자극에 쉽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진민정 외, 2025).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는 빠른 화면 전환으로 주의를 끌고, 또래와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청소년에게 단순한 오락 기기가 아니라,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핵심 매체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95.3%에 이릅니다(방송통신위원회, 2024). 문제는 이러한 일상이 플랫폼이 설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그림 2.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정부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짧은 영상 콘텐츠의 확산과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를 꼽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설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이 사회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 태도와 시민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시 짜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디지털 시민성’이란 무엇일까요?

시민성이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질을 말합니다(Westheimer & Kahne, 2004). 시민교육은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한 지식과 가치, 태도, 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민이 정보를 접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광장과 의회뿐 아니라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시민성'입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이 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곳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입니다. 유럽평의회는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동체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목적을 '학습자가 디지털 사회에서 민주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Council of Europ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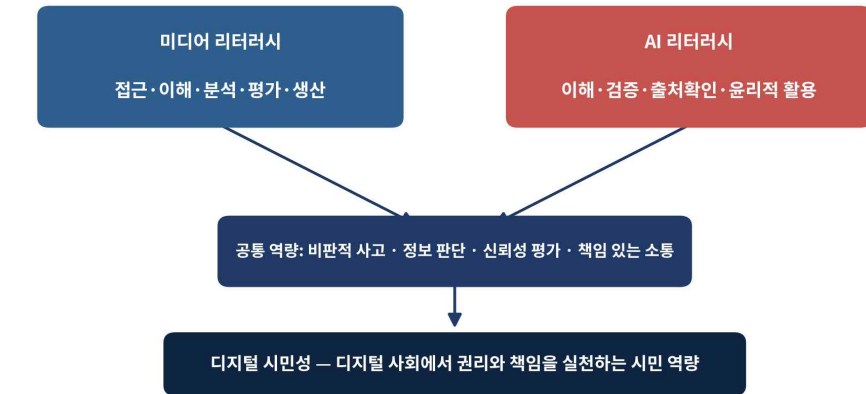
유럽평의회는 이를 접근과 포용, 학습과 창의성,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윤리와 공감, 건강과 웰빙, 온라인 소통, 적극적 참여, 권리와 책임, 개인정보와 보안, 소비자 인식 등 10개 영역으로 나누고, 5세부터 18세까지 약 300개의 연령별 학습 목표로 구체화했습니다(DCE Planner, 2025). 2025년을 '유럽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해'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역량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책임 있게 소통하는 역량입니다(Potter, 2019). 유네스코는 이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로 발전시켜 민주사회의 핵심 시민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UNESCO, 2021).

디지털 시민성은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정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소통하며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역량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두 개념은 상하 관계라기보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김아미 외, 2019).



출처: Council of Europe(2019); UNESCO(2021); UNESCO(2023)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구성과 미디어 리터러시·AI 리터러시의 역할

생성형 AI 시대,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

생성형 AI의 확산은 디지털 시민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ChatGPT, Gemini, Claude 같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스러운 답을 내놓지만,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오류나 편향, 허위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생성형 AI가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동시에, 정보의 신뢰성과 출처 확인,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과제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UNESCO, 2023).

최근 연구에서는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의견을 지나치게 맞장구쳐 주는 '과잉 동조(sycophancy)'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이미 가진 생각을 그대로 강화하고,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따져볼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Cheng et al., 2026). 또한 AI가 문제 해결을 대신할수록 스스로 정보를 찾고 판단하는 과정이 줄어드는 '인지적 외주화(cognitive outsourcing)'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Acemoglu et al., 2026).

생성형 AI, 빠르게 확산되지만 검증 역량은 못 따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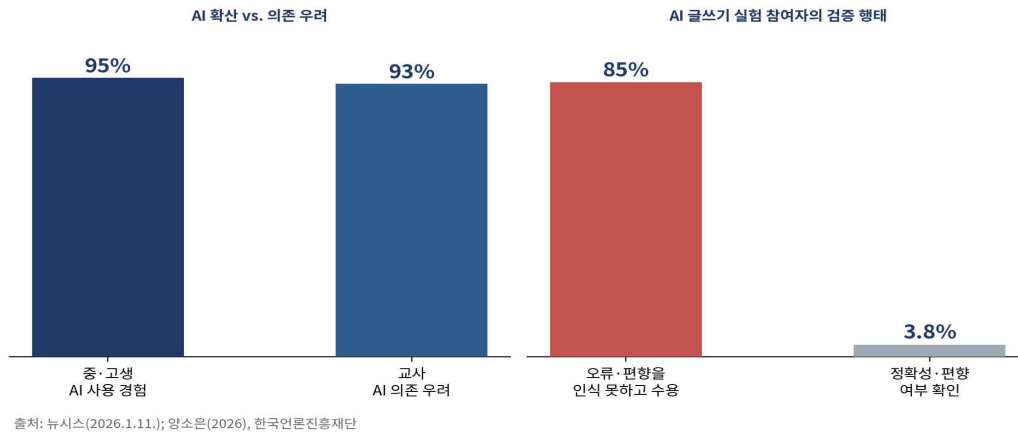


그림 4. 생성형 AI 확산과 검증 역량의 공백

AI 활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역량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초·중등 교육을 위한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AILF)'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리터러시를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AI를 이해하고(Engage) 활용해 창작하며(Create) 적절히 관리하고(Manage) 책임 있는 AI 활용에 참여하는(Design) 역량으로 제시합니다(OECD·EC, 2025).

3. 지금 학교의 모습은?

교육과정은 나아지고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디어교육과 정보교육, AI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국어, 사회,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어 소양, 디지털 소양과 함께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으로 제시하고, 모든 교과와 연계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교육부, 2022).

다만 지금의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정보 검색, AI 활용 같은 '기술 역량'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구조와 알고리즘의 영향, 허위정보, 혐오표현과 차별, 디지털 공론장에서의 시민 참여 같은 '시민성' 관련 내용은 아직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 사용법은 배우지만, 자신이 접하는 정보가 어떤 구조 속에서 선택되고 추천되는지는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왜 뿌리내리지 못했을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토대가 되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된 교과 없이 정보·사회·도덕 교과에 나뉘어 있고, 실제로는 연 1~2회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일회성 특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진민정 외, 2024). 혐오표현이나 정치 갈등, 플랫폼의 영향력 같은 핵심 주제는 오히려 수업에서 다루기를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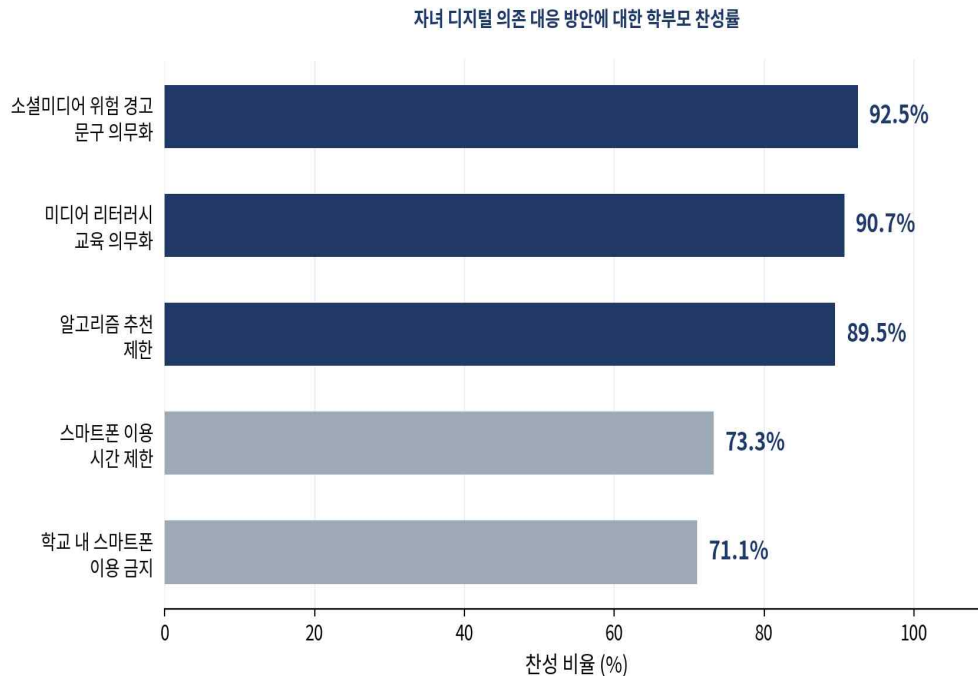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사들은 스마트폰이 이미 학생들의 일상 전반을 조직하는 기본 인프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모와의 연락, 학원 일정 관리, 또래 관계, 학급 활동까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와 밈에서 나온 표현이 교실로 그대로 들어오고,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갈등이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진민정 외, 2025).

교사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는 능숙하게 다루지만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교사 스스로도 생성형 AI 시대에 필요한 전문 연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이순영, 2022; KERIS, 2022).

학부모 9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소셜미디어 위험 경고 문구 의무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알고리즘 추천 제한처럼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압도적인 찬성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 제한이나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같은 단순 이용 통제에 대한 찬성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부모들은 통제보다 자녀 스스로

건강한 이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환경 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민정 외,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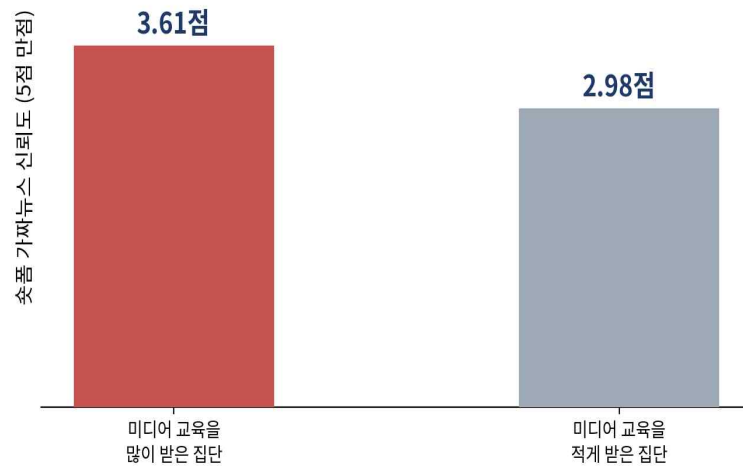


출처: 진민정 외(2025), 학부모 921명 대상 설문조사 (파란색: 플랫폼 책임·교육 강화 항목 / 회색: 이용 통제 항목)

그림 5. 자녀 디지털 의존 대응 방안에 대한 학부모 찬성률

흥미로운 점은, 미디어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오히려 솜품 가짜뉴스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중·고등학생 5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디어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의 가짜뉴스 신뢰도 점수(3.61점)가 적게 받은 집단(2.98점)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응답자 모두 최근 1년 안에 미디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실제 교육 시간은 연평균 6.6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론 위주의 짧은 교육이 오히려 '나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과신을 심어주고, 이 자신감이 비판적 경계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이장석, 2026).

미디어 교육을 더 받았는데,
가짜뉴스 신뢰도는 오히려 높았다



출처: 이장석(2026), 중·고등학생 517명 대상 (연평균 미디어교육 시간: 6.64시간)

그림 6. 미디어 교육량과 숏폼 가짜뉴스 신뢰도의 역설

학생들의 목소리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 2026년 5월 열린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학생 간담회에서, 참석 학생들은 허위정보나 혐오 표현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4.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시민성은 특정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시민교육의 내용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교육과정의 형태는 다르지만, 디지털 시민성을 '시민교육의 연장선'으로 이해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유럽평의회는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환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역량으로 설명합니다. 유네스코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OECD는 비판적 사고와 협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미래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멀티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삼아 국어, 사회, 예술 등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다룹니다. 프랑스는 시민교육과 미디어·정보교육을 연계해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가르칩니다.

에스토니아는 2025년 9월 'AI Leap'을 시작해 전국 고등학교에 AI 학습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학생이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검증하도록 돕는 '소크라테스형 AI 챗봇'을 핵심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AI를 잘 쓰는 법'보다 'AI와 함께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AI Leap Foundation, 2025).

오스트리아는 2027/2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미디어와 민주주의'를 주당 2시간 필수 교과로 신설합니다. 미디어가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허위정보와 극단적 주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교과 신설은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설정 같은 청소년 보호 정책과 함께 발표되어, 규제와 교육을 함께 추진하는 접근을 보여줍니다(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2026).

OECD는 2029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미디어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MAIL)'를 새로운 평가 영역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미디어와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역량을 국제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입니다.

표 2. 주요 국가·기구의 디지털·AI 시민성 교육 특징

국가·기구	핵심 특징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핀란드	다중 리터러시 기반 전 교과 통합, 국가 미디어 교육 체계	범교과 시민 역량 설계 + 전담 지원기관 모델
프랑스	시민교육과 미디어 교육 통합, 학년별 위계 있는 교육과정	시민교육과 미디어 교육 통합 + 교원 지원 체계

국가·기구	핵심 특징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에스토니아	AI Leap·소크라테스형 AI 챗봇, AI 결과 검증·설명 활동 중심	AI 활용보다 비판적 판단 역량 강화
오스트리아	'미디어와 민주주의' 필수 교과 신설 (2027/28~)	미디어·민주주의를 독립 교과로 제도화, 규제와 교육 병행
유럽평의회	5~18세 연령별 성취기준 300여 개, 10개 핵심 역량 체계화	연령별 위계 있는 교육과정 모델
OECD	PISA 2029 미디어·AI 리터러시 평가 도입 예정	국제 기준에 맞춘 교육과정 체계 정비

출처: 유럽평의회(2025); OECD(2025) 재구성

이러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시민성은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의 확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민성의 핵심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는 AI 활용과 함께 정보의 신뢰성, 비판적 이해, 책임 있는 활용을 포함하는 교육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5. 토론을 위한 생각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Q1.**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려면, 학교 교육과정은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 Q2.** 혐오 표현이나 정치적 갈등처럼 민감한 주제를, 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 Q3.** 이론 중심의 짧은 특강을 넘어, 학생이 실제로 비판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 Q4.** 학부모는 통제보다 교육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가정과 학교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Q5.**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며

국제사회의 논의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학교시민교육은 디지털 시민성을 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 삼고, 미디어 교육과 정보교육, AI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내자료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20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6).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김아미, 이지영, 이윤주, 양소은(2019). 「디지털 시민성 개념 및 교육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김영은·정세훈(2023). 지역별 국가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차이 및 요인 분석. 한국언론학보, 67(6), 223-255.
- 뉴스시(2026. 1. 11.). 서울 중·고생 95% "생성형 AI 써봤다"...교사 93% "의존 걱정돼".
- 미디어스(2026. 3. 26.).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600만달러 배상 판결.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24).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이승진(2021).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방향 논의. 사회과학연구, 32(3), 103-127.
- 양소은(2026). 독자적 사고 영역까지 AI 의존 심화. KPF 미디어브리프 2026년 1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2026. 3. 27.). Kinderschutz im Netz: Bundesregierung setzt Mindestalter für Social Media fest.
- 이순영(2022).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및 교사 인식 조사. KERIS 이슈리포트.
- 이순영(2023). 국내 초등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쟁점과 정규화에 대한 탐색적 논의. 청람어문교육, 88, 157-192.
- 이장석(2026). 청소년의 숏폼 뉴스 신뢰도 형성 메커니즘 연구.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
- 진민정, 양소은, 이은경, 이하나(2025). 「불안 세대와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언론진흥재단.
- 진민정, 이자벨 페록 뒤메즈, 김아미(20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교강사 양성 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2025).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해외자료

- Acemoglu, D., Kong, D., & Ozdaglar, A.(2026). AI, human cognition and knowledge collapse. NBER.
- AI Leap Foundation(2025). AI Leap programme overview.
- Cheng, M. et al.(2026). Sycophantic AI decreases prosocial intentions and promotes dependence. Science.
- Choi, M.(2016). A concept analysis of digital citizenship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44(4), 565-607.
- Couldry, N., & Hepp, A.(2016). The Mediated Construction of Reality. Polity Press.
- Couldry, N., & Mejias, U.(2019). The Costs of Conne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uncil of Europe(2019).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 Council of Europe(2025). The DCE planner: A curriculum framework fo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European Commission(2023).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16).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Mossberger, K., Tolbert, C. J., & McNeal, R. S.(2007). Digital Citizenship: The Internet, Society, and Participation. MIT Press.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EC(2025). Empowering Learners for the Age of AI: An AI Literacy Framework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ariser, E.(2011). The Filter Bubble. Penguin Press.

Potter, W. J.(2019). Media Literacy. SAGE.

Ribeiro, M. H. et al.(2020). Auditing radicalization pathways on YouTube. ACM FAccT.

Ribble, M.(2007). Digital Citizenship in Schools. ISTE.

Sunstein, C.(2017). #Republic.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e Guardian(2018. 2. 2.). How an ex-YouTube insider revealed a vast ecosystem of manipulation.

UNESCO(2021).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n Essential Competency.

UNESCO(2023).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Westheimer, J., & Kahne, J.(2004). What kind of citiz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37-269.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의 약속

존중과 평등

-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참여자로 존중합니다.
- 나이, 성별, 지역, 경험, 신념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상대를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표현 대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 설득하거나 이기기보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데 집중합니다.

경청과 공감

- 우리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 나와 다른 의견도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존중합니다.

함께 만드는 대화

-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말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합니다.
- 가능한 한 사실과 경험에 기반해 이야기합니다.
- 주제에 관해 충분히 학습하고, 준비된 태도로 참여합니다.
- 단순한 주장보다 이유와 맥락을 함께 나눕니다.